
2015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

2015. 1.



국무조정실
공직복무관리관실

목 차

I. 2015년 공직복무 관리 여건	1
II. 2015년 공직복무 확립 대책	2
1. 기본방향	2
2. 중점 추진사항	3
III. 행정사항	8

I

2015년 공직복무 관리 여건

- 금년도는 현 정부 출범 3년차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
 - 공직사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진력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구축 필요
 - 또한, 국가·사회적 적폐, 불공정 요인이 국가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

- 그러나,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
 - 세월호 사고, 방산 비리, 정부 문건 유출 등 공공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부정·비리 발생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 저하 지속
 - 공무원연금 개혁, 지속적인 공직혁신 추진 등으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리 유혹에 취약하게 되는 환경 조성도 우려되는 상황
 - 국민들의 눈높이 변화에 따른 공직 청렴도 기대수준 상향과 함께 공직비위 행태의 지능화·음성화·다양화 추세 지속

- ◇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없이 추진(대통령, 2015년 신년사)
- ◇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음(대통령,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)

1. 기본 방향

목 표

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국민신뢰 구축

- ◆ 선택과 집중으로 취약분야 맞춤형 점검 ⇒ 공공부문 적폐 근절
- ◆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⇒ 감사·감찰 협업시스템 구축
- ◆ 공직 비위 무관용원칙 엄격 적용 ⇒ 공직사회 근본적 의식 전환
- ◆ 공직사회 사기진작 추진 ⇒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

4 대 중점 추진 사항	가. 복무점검 및 기획 점검 강화로 공직 기강 확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문서·(사이버)보안 점검 등 복무실태 점검 강화 ② 구조적·반복적 비리에 대한 기획점검 활성화 ③ 주요 정책현안 점검 강화로 국정성과 창출 지원
	나. 감찰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간 협력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자체 감사역량 강화 및 자체 감사활동 활성화 (김영란법 시행 대비) ②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·운영
	다. 공직 비위에 대한 무관용원칙 엄격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직 비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초 확립 ② 감찰결과 공표 활성화 검토 ③ 공직복무 평가·환류 강화
	라.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포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 해소 지원 ② 우수공무원 발굴·포상

2. 중점 추진사항

가. 복무점검 및 기획점검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

① 문서(사이버)보안 점검 등 복무실태 점검 강화

□ 문서관리 및 (사이버)정보·보안점검 철저

- 비밀문서 또는 중요문서의 방치, 관리 소홀 등 중요 문서 관리 부적정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위규사항 엄단
* '14년 점검결과, 지적사항이 많았던 기관에 대해 우선 점검 실시
- 중요문서의 고의 유출 또는 보안사고 등 (사이버)정보·보안 관련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고,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

□ 주요 시설 근무·관리실태 집중 점검

- 전력·가스·석유·전산 등 국민의 생활·안전과 직결된 주요 국가기반시설 근무·관리실태 점검 확행
* 필요시 국민안전처 안전점검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 실시

□ 취약시기·취약부서 등 근무기강 점검 강화

- 명절·휴가철·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 및 금품수수 등 공직 비위 집중 점검
*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, 유연근무제 등으로 인한 기강해이, 업무공백 차단
- 취약부서 등 근무자에 대한 집중 감찰
 - 대민업무 및 대민 접촉이 잦은 부서 공직자의 복무관리 강화
 - 재외공관,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근무자 대상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공직복무관리 사각지대 해소

② 구조적·반복적 비리에 대한 기획점검 활성화

- 구조적·반복적 비리에 대한 기획점검을 상시화하여 비위자 처벌 및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
 - 비위제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고, 수집된 제보를 토대로 점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
- 각급 기관별로 비리 발생 빈도가 높은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불합리한 제도·관행 개선 추진
 -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비위* 중 각 기관 특성에 맞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정·점검(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·추진)
 - * 국민안전 위해, 폐쇄적 직역, 국가재정 손실, 반복적 민생, 공정성 훼손 비리
 - 과거에는 비리로 인식되지 않았으나, 국민의 눈높이 변화에 따라 개선·시정이 필요한 불합리한 관행 점검·개선
 - * (예시) 출장여비 부당지출, 업무추진비 관행적 집행, 전별금 지급관행, 공용장비·차량의 사적사용,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, 법인카드 변칙사용 등

③ 주요 정책현안 점검 강화로 국정성과 창출 지원

- 국정 성과 저해를 유발하는 현안에 대한 신속 점검을 통해 국정 애로 해소 및 국정 성과 창출 지원
 - 국정과제 및 주요현안 중 추진이 극히 부진한 과제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, 부진원인에 따라 제도보완 및 인적문책 실시
 - * 상시점검은 시책담당 부서, 문제 심각시 감사담당 부서에서 개입·점검
 - 무사안일·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정성과 저해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점검 후 조치
-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불문 처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적극행정 유도
 - * 적극행정 면책사례는 「공직복무관리 평가」에 반영 및 공직복무 유공 포상 추진

나. 감찰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 추진

① 자체 감사역량 강화 및 자체 감사활동 활성화

□ 자체 감사역량 강화

- 감사관실 유경험자 중점 배치 및 전보제한 기간 준수, 전문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참여 등 **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**
- 감사 직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·인사우대 등 **감사직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**

* 실적 우수 감찰부서는 공직복무 유공 포상에 반영

□ 자체 감찰활동 및 자정활동 강화

- 공직비위 **내부신고망 활성화**, 공직비위 인터넷 접수 창구 **개설·확대** 및 외부 신고에 대한 감사 강화
- 자체 **자정활동 및 청렴교육을 강화**하고, 반부패 교육 및 자체 자정활동에 대한 **기관장 관심도 제고**
- 「부정청탁 금지법(안)」 제정* 관련, **공직기강 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고, 교육·홍보 및 예방점검 강화 등 추진**

*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는 대가성 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,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등

②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·운영

- 국조실 중심으로 각 부처 감사·감찰 기능간 **협업망 구축**
 - 연 2회 감사관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, 목적에 따른 **부문별 감사관회의 개최 활성화**
 - 행자부, 권익위, 검찰, 경찰, 감사원 등 핵심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(적극적 수사 의뢰, 정보 공유, 합동 기획점검 등) 구축
- '부패척결추진단'과의 **연계·협력을 활성화**하여 구조적·반복적 공직부패 척결 추진

* 공직감찰 업무 연계·협력 및 '정부합동 부정·부패 신고센터' 자료 공유 등

다. 공직 비위에 대한 무관용원칙 엄격 적용

① 공직 비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확립

- 공직 비위 적발시 받게되는 불이익 처벌이 기대수익보다 훨씬 크게 되도록, **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처벌**
 - ‘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(대통령훈령)’에 따라 엄중조치하고, 형사상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사안도 행정적 징계조치 적극 검토
 - 공금횡령·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 각 부처별 「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」을 엄격 적용, 고발조치 확행
- 온정적 처벌 관행 타파를 위해 **온정적 처분 소지**(징계위 미회부, 징계 관련 규정 위반 등) 및 **자체적발 저조기관에 대한 점검 실시**(연 2회)
 - 각 계기별 자체점검의 객관성 확보 및 온정적 처분 방지를 위해 각 부처 감사관실간 CROSS 점검 혹은 각 기관 점검시 타부처 감사관 참여 등 검토
 - * 비위공직자에 대한 조치실적은 「공직복무관리 평가」에 반영

② 감찰 결과 공표 활성화 검토

- 감사·감찰 결과는 예방효과 및 소속 직원 경각심 환기를 위해 **공표 활성화 검토**
 - * 방안 :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공표하고, 국조실 등 외부기관 통보 사항의 경우에는 최종 확정 후 외부기관 통보사항임을 적시하여 공표
- 각 기관은 공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**근본적인 공직 사회 의식변화 유도**

③ 공직복무 평가환류 강화

- 각급 기관의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및 공직복무 추진실적을 '15년부터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추진
- 공직복무관리 정부업무평가 우수·미흡사항은 '감사관회의(연 2회 이상)' 통해 전 부처 전파하고, 미흡 부처는 엄중 경고

라.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포상

①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지원

-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처별로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추진
 - 공직사회의 이미지 개선,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기관장 격려 등 다양한 방안 강구
 - 특히, '14년도 공직복무 평가결과, 연가사용률이 저조한 기관은 연가 사용에 대한 기관장 관심 제고 필요
- 음해 등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 공직자 고충 해소방안 강구·시행

② 우수공무원 발굴·포상

- 국무조정실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활동과 병행하여 모범 공직자 발굴·포상 예정 ('15년말)
 - 적극행정 실천자 및 일선 행정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사회봉사를 솔선수범한 청렴·성실한 모범공직자
 - 각 부처에서 정부시책·공직기강·부패척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공무원
- 각급 기관에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 공직자를 발굴하여 정례적으로 자체 포상·격려하는 방안 추진
 - 가급적 하위직·일선근무자 위주로 발굴하여 자체 포상하고, 공적이 탁월한 경우 국무조정실로 정부 포상 건의

Ⅲ

행정사항

□ 기관별 「2015년 공직복무관리계획」 수립·추진

- 금번에 통보된 중점추진사항 등을 반영한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, 2015. 2. 13.까지 국무조정실에 통보하고 추진

* 자체계획 수립시 ①문서·(사이버)보안 점검 등 복무실태 점검계획(취약시기·취약시설 근무실태 점검 등 포함) ②공직비위 점검계획(취약분야 기획점검 및 불합리한 관행·제도 점검·개선 등 포함) ③국정과제 및 주요시책의 추진실태 점검계획 ④감찰기능 강화 및 자정활동 추진계획 ⑤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등을 포함시키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

-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동 지침에 따라 부처별 자체 세부지침을 별도 마련·시행

* 자체 세부지침 수립 및 추진 대상 기관의 범위는 산하단체 등의 규모,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

-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·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구조적·관행적 부조리, 금품수수 등 비위, 근무기강 등을 철저히 점검

□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·평가

- 각 부처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국무조정실로 제출 → 각 부처별 추진실적은 연말 종합평가

- 각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복무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·평가하는 등 이행상황을 관리

-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및 비위공직자 조치, 주요시책 추진상황 등을 수시 분석·점검

* 산하단체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관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

□ 다른 지시사항의 폐지

- 「2014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」(국무총리 지시 제2014-1호)은 폐지함